

북한의 기업개혁에 대한 일고찰*

- 기업경영방식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정은 찬**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기업개혁이 추진되어 온 경과를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 경제성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기업경영방식을 계획에 따른 방식과 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방식으로 구분하고, 자율적 방식에 의한 기업경영이 확대될 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북한이 기업경영에서 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방식 비중을 축소하면 실질GDP가 감소하고, 투자가 줄어드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생산 감소는 시장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기업경영방식 비중이 증대될수록 실질GDP,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생산량 증가에 따라 물가도 크게 하락해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 대외무역 범위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김정은 정권이 기업의 소유구조 개혁을 배제한 채 지배구조와 생산체계에서의 부분적 개혁만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지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보여

* 본고는 2020년 통일교육원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된 논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 통일교육원 교수, entjok@gmail.com

준다. 이는 북한의 기업개혁이 향후 자율적 기업경영방식 비중을 더욱 증대시키는 등의 더 높은 단계의 개혁을 지향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 이러한 바람직한 기업개혁을 추진할 경우 북한 기업의 직접적인 대외무역 및 외국기업과의 합영·합작 추진 환경이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이는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고착시키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 실현에서 주요 동인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기업개혁,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중앙지표, 기업소지표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기업경영관리에서 선대지도자 시기보다 더 강력한 기업개혁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¹⁾ 이러한 기업개혁 정책에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2012.06.28.)²⁾,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1) 김정일 시기 북한의 기업개혁 관련 정책으로는 2002년 7월 1일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2003년 시행한 ‘상업개혁조치’(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과 수입물자시장, 지역별 종합시장의 공설화), 2010년 제정한 ‘기업소법’ 등이 대표적이다.

2)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2012년 6월 28일 ‘조선신보’를 통해 ‘새로운 경제관리조치’, 소위 ‘6.28방침’으로 보도, 이후 2012년 7월 14일 북한의 ‘노동신문’에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으로 언급되었다. 그 내용은 “독립채산제 공장기업소들에서는 국가가 정한 1등급의 비중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1등급을 계획보다 더 생산한 작업반이나 로동자들에게 응당한 로동보수가 차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북한은 2013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경제관리방법 개선’을 “우리식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하고 근로인민대중이 생산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에서 경제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강조하였다. 2014년 이후에도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한 2016년 5월 8일 노동당 7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과제로

(2014.05.30.)³⁾, ‘기업소법 개정’(2014, 2015), ‘상업은행 설립’(2016) 등이 포함된다.

기업개혁 정책의 시행으로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경영되던 북한의 기업은 중앙지표를 생산하는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한하여 전략적 경영관리에 중점을 둔 자율적 경영이 허용되고 있다. 즉, 이 범위에 속한 기업들은 이익 창출의 목적을 전면에 내세워 계획작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시장수요를 고려한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기업소지표를 자체로 발굴하고 이를 중앙의 기준을 받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북한의 기업개혁은 그 성격에 있어서 기업의 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에너지, 원자재, 자금 등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방식으로 조달해주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기업경영의 본질적 특징인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의한 계획적인 기업경영관리의 틀에서 벗어나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 비중이 증가하고 자율적 판단에 의한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노동의 대가에 따른 물질적 자극(인센티브)이 증가하고 상품화폐관계, 가치법칙 등의 경제적 공간도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

북한의 기업개혁에서 중점을 이루는 것은 기업경영방식의 변화, 즉 기업의 자율적 경영이 확대된 부분이다. 생산과 분배체계에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기능이 완화되어 생산계획작성⁴⁾, 생산에 필요한 재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을 강조하였다.

3) 2014년 5월 30일 북한은 김정은 노작(당, 국가, 군대기관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기업소들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하여 당과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협동농장에서는 분조단위에서 근로자들의 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제시하며 사회주의 원칙대로 일한 것만큼 별도로 하여 모두가 공정하게 분배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여 기업경영관리에서 ‘대안사업체제’를 삭제하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핵심원리로 격상시켰다. 농업부문에서는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를 삭제하였다.

4) 북한은 2015년 6월 25일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하여 경제계획지표 분권화, 계획의

정 조달, 자재 조달, 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 등을 자체로 해결해야 하며, 노동력 조달에서는 국가가 배치해준 노동력에 한하여 다른 기업과의 필요 노동력의 교환을 통한 활용 면에서만 자율적 권한이 행사된다. 한편 물자 판매, 소득분배에서는 중앙의 물자공급계획, 예산제 및 독립채산제 기업경영 규정에 치중했던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중앙부서, 지방부서, 기업소 자체해결 방식이 결합된 자율적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북한의 기업개혁은 2002년 7월 1일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 이후 2012년 6월 28일 ‘우리식경제관리방법’, 2014년 5월 30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시행, 2014, 2015년 ‘기업소법 개정’, 2016년 ‘상업은행 설립’ 등에 힘입어 진일보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기업개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소유구조⁵⁾ 개혁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⁶⁾와 생산체계의 개혁에서도 부분적으로만 용인되고 있다. 기업개혁은 누가 소유하는가?,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는가? 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맞물림과 주문계약, 계약 체결 방식에서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제13조에서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중앙지표의 축소, 기업소 및 단체가 관리하는 지표를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인민경제계획법’의 개정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계획지표의 분담에서는 기존법령에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으나, 개정법령에서는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분담한다. 즉,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지표 중 중요지표는 중앙지표로, 그 밖의 지표는 지방지표와 기업소지표로 분담한다”로 명시하였다. 둘째, 계획의 맞물림과 주문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기존법령에서는 언급 없던 부분을 개정법령에서 “인민경제계획을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분담된 지표의 수요와 원천을 맞추는 방법으로 하는 한편, 이러한 맞물림을 주문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셋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기존법령의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기관, 기업소 등은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지 않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주문계약은 연중에 수시로 체결할 수 있다”는 개정내용을 첨부하였다(양문수 2017, 91).

- 5) 기업의 소유권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control), 기업의 잔여 수익을 전유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appropriate the firm's residual earning), 타인에게 위의 두 권리(통제권과 잔여수익 전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처분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현영미 2002, 15).
- 6)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의 통제와 관련된 권리와 책임의 구조이다. Hart는 기업의 지배구조 형태는 첫째, 기업의 개별적 소유(의사결정권 독점), 둘째, 소유권의 결합(의사결정권 분할), 셋째, 합명회사-partnership(의사결정권 다수결)이다(Hart 1995).

수 있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개혁은 기업의 이익 창출에 강한 유인을 주는 소유구조의 개혁보다는 지배구조 및 생산체제에서의 일부분 개혁, 기업경영의 자율성 확대에 치중되어 있고 이 또한 한계를 내재한다. 시장 수요를 반영한 기업소지표의 선정에서 기업의 독단적 결정보다 중앙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생산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으며, 중앙지표와 지방지표의 경우 중앙부서와 지방부서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북한의 자율적 기업경영을 보장받는 기업의 비중도 제한적이다.⁷⁾ 이에 따라 북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기업개혁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태생적 모순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게 하는 데서 긍정적 변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업개혁의 방향성, 질적 수준이 사회주의 경제원칙 준수의 압박을 받지 않아야 한 단계 높은 개혁으로 승화될 수 있다. 2019년 12월 28일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운영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북미 간 비핵화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장기전으로 지속될 것임을 언급하며 ‘자력갱생’에 기반한 ‘정면돌파’를 전면에 내세울 것과 경제관리에서 당국의 집행력과 통제력, 관리력을 보강해 나갈 것임을 공표하였다. 특히 스스로 경제 분야의 문제점으로 “중요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하다”고 지적하였으며,

7) 이석기 외(2018, 74)는 북한의 내부문건(2015년 교육자료)을 참조하여 북한의 기업소지표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과를 밝혔다. “북한은 중앙지표인 국가계획위원회 지표는 대폭 축소하고 내각의 성지표는 모두 정리하여 기업체들에 주었다. 이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전략지표와 국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지표만(중앙지표로) 계획화하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 조정되었으며, 북한의 총 17만 개 지표 중 1,100개만 중요한 지표로 정리하였다고 한다. 나머지는 지방지표와 시·군지표, 그리고 기업소지표로 분류되는데, 지표 수로는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국가지표(중앙지표)의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중공업부문의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도 70% 정도를 국가계획에 따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관리와 경제 관리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2021년 1월 5일 개최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공포하고 이를 위한 ‘자력갱생’ 및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및 일원화 통제체계”의 강화, “국영산업의 확대를 통한 상업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 및 조직적 통제력 회복”, ‘내각책임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기업경영관리를 시사하였다.⁸⁾ 이는 북한의 기업개혁이 경제성장 도모를 목표로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내재하며 시장경제제도 도입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기업개혁과는 아직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기업개혁이 어느 정도의 개혁적 성격을 띠고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 진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두 번째 목적은 김정은 시대의 기업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기업경영에서의 자율적 운영범위가 확대되는 데 따라 어떤 파급효과를 보이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현재의 기업개혁이 내재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기업개혁을 추진할 경우 남북경협 추진에 따른 평화경제의 실현, 우리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찾으려고 한다.

8) 2016년 5월에 개최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북한은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공장기업소가 부여된 자율 경영권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9)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기업의 소유구조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20여 년이 걸렸다. 러시아와 폴란드가 단 몇 년간에 걸쳐 급진적 사유화를 추진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기업의 소유구조 개혁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초기개혁 단계에 완벽하게 진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2. 기존 연구 분석

북한의 기업개혁과 관련된 기존 연구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해 연구한 이석기(2018, 31-3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개편에 대해 평가하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 밝혔다. 북한 경제관리체계 개편이 내재한 특징으로는 첫째,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활성화의 모색, 둘째, 시장을 계획화 체계에 이식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 셋째, 기업 자율성 강화와 함께 제도화를 통한 통제력 회복 추구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북한이 기업경영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생산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국가와 기업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한 점에서 기업경영에서 나타나는 모순 및 갈등이 제거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소유권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김정은 시대 개정법령을 통해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조명함으로써 북한의 기업개혁이 ‘기업소법’ 개정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적 보장을 받게 되었는지를 밝힌 양문수(2017, 81-115)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김정은 집권 이후 두 차례(2014년 11월, 2015년 5월) 개정된 ‘기업소법’이 2010년 처음으로 제정될 당시에 언급하지 않았던 기업의 경영권·계획권·생산조직권·관리기구 및 노력 조절권·제품개발권·품질관리권·인재관리권·무역과 합영·합작권·재정관리권·가격제정권 등에서 개정내용을 명시하였음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개정된 기업소법에서 기업의 경영권이라는 새로운 개념 및 범주가 등장했다는 점을 강조(“기업소의 경영권을 바로 행사하는 것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중요 요구”-개정 ‘기업소법’ 제29조)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의 경

제 운영에서 중앙집권적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기업의 역할, 자율경영권이 확대되는 현실을 북한의 주요 국가지표인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 중 정부는 중앙지표만 계획화하고 기업이 기업소지표의 계획을 위임받아 기업경영을 한다는 부분을 조명하였다.

북한의 기업개혁과 관련한 연구로는 또한 김연철·양문수 외(2004)의 북한의 시장과 기업개혁을 노동인센티브제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내용이 있다. 본 연구는 2002년 7월 1일 새로운 경제관리개신조치가 제시된 이후 진행된 연구로서 북한의 기존 기업관리 시스템과 인센티브 구조를 국가·기업·경영자·노동자의 관계에서 분석하였으며, 독립채산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노동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조명하였다. 이외에 북한의 경제변화에 대한 분석한 박형중(2015), 김석진(2013)의 연구가 있다.

위에서 전술한 기존 연구들은 북한의 경제변화에 중점을 두고 기업 경영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과 법제를 통해 어느 정도 제도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의 기업개혁 추진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한계 도출에서는 유용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북한이 기업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에,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정량적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기업개혁을 기업경영의 자율성 확대 면에서 집중 조명하고 기업경영에서의 생산방식을 계획에 의한 방식과 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방식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최초의 정량분석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3. 연구 방법 및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기업개혁 추진현황은 문헌조

사를 통해 진행하며 기업개혁(기업경영의 자율성 확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량분석은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이하 CGE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CGE 모형이란 경제에 외생적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기업운영방식을 중앙의 계획에 따른 방식과 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방식으로 구분하고 자율적 기업경영방식이 확대될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북한이 추진 중에 있는 기업개혁의 내용과 성과 및 한계를 기술한다. I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북한의 기업경영방식 변화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 부분에서는 북한이 기업개혁 과정에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을 증대시킬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려고 한다.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연구 결과의 요약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서술한다.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은 북한의 기업개혁이 갖는 의미가 시장을 활용한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법적 보장을 기반으로 기업의 이익 창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 선택과 결정에 의해 직접적인 대외무역 및 합영·합작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찾으려고 한다.

II. 북한의 기업개혁 추진 현황

1. 사회주의 원칙하에서 북한의 기업경영방식

북한의 기업소법 제2조에 의하면 북한에서의 기업은 “일정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활동을 직접 조직 진행하는

경제단위이며,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는 생산, 건설, 교통운수, 봉사단 위 같은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¹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기업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에 따라 생산 → 분배 → 교환 → 소비의 경제순환 과정에 참여하며 국가에 의해 경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주의 기업경영의 본질적 특징은 첫째, 기업관리에 대한 정치적 지도, 둘째,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의한 계획적인 기업관리운영, 셋째, 군중노선의 관철에 있다. 사회주의 기업경영의 과도적 특징에는 첫째, 기업경영관리에서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한다는 것과 둘째,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과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을 기업경영관리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과도적 특징을 반영한 경제적 공간의 올바른 이용을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의한 기업경영의 주요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적 기업경영의 기본원칙(박호림 외 2002, 38-45)은 첫째,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의 결합, 둘째,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기업의 창의성 결합, 셋째, 민주주의와 유일적 지휘의 결합¹¹⁾, 넷째,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결합, 다섯째, 기업경영관리에서의 실리 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기업은 사회주의 기업경영의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경영활동의 계획화, 생산조직, 기술관리, 설비관리, 동력관리, 품질관리, 자재 및 제품관리, 노력관리, 후방사업 및 재정관리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의 생산계획은 생산부분별 공장기업소가 일정한 기간(연, 분기, 월)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2010.11.11.) 제2조 기업소법의 정의

11) 민주주의와 유일적 지휘의 결합원칙은 경제주체인 생산자와 지휘자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활동 방식을 규정한 원칙이다. 기업경영관리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한다는 것은 생산자대중을 기업경영관리의 주인으로 참여시켜 그들의 지혜와 창의성을 적극 발양시켜 기업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나감을 의미한다. 기업경영관리에서의 유일적 지휘는 행정지휘관이 기업소의 경영활동 전반을 장악하고 조직지도를 함을 의미한다(박호림 외 2002, 41).

에 생산하여야 할 생산물의 품종과 규격, 수량, 품질과 관련한 과제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생산계획은 공장기업소 계획부서에서 전년도 생산실적 통계와 생산가능 능력에 기초하여 예비숫자로 작성한 이후 계획작성 상급기관에 제출하고 제출된 계획이 상급기관에서 검토되어 통제숫자 → 계획숫자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하달되게 된다.

북한의 기업이 생산지표에 따른 생산계획을 작성하고 하달받는 과정은 계획작성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기업으로 분권화되는 기업 관련 개혁정책(2002.7.1.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대부분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부 말단 공장기업소에서 예비숫자 형태로 작성하여 상급기관에 제출한 생산계획은 시(군)구역 계획부서를 거쳐 도(직할시·특별시) 지구계획위원회로 상달되어 검토과정을 거친 이후 중앙의 계획부서인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경제부문별 수요와 공급을 맞물림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다시 도(직할시·특별시)지구계획위원회 → 시(군)구역 인민위원회 계획부서 → 공장기업소 계획과를 거쳐 하달되어 형식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 다시 상달되어 계획 숫자로 최종 확정된다. 이후 기업소에 최종 생산계획으로 하달되면 생산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작성과정과 이에 따른 생산과정은 사회주의 경제관리 특성상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에너지, 노동력 등의 공급계획, 그리고 생산 이후의 생산물 판매 및 분배, 근로소득 분배¹²⁾ 계획에 이르기까지 중앙의 기본계획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북한의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 국가적인 재정

12) 북한의 근로소득 분배는 노동자와 사무원의 경우 매월 지급되며, 협동농장 농민의 경우는 1년에 1회(매해 연말) 지급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의 근로소득 명칭은 '생활비'이며 생활비 유형에는 도급생활비, 정액생활비가 있다. 이에 상급과 장려금, 가급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한다. 이는 계획을 초과했거나 노동생산능률을 최대로 발휘한 근로자, 근무연한이 높은 근로자에게 장려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조에 의해 회생되어 기업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존한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운명이 기술혁신에 의한 원가와 비용의 절감,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것과는 상반된다. 이러한 북한의 기업경영방식은 다음과 같은 폐단을 누적시키고 있다. 첫째, 계획의 초과달성을 위해 노동력과 자재, 재정보조금의 많은 확보를 목적으로 허위보고를 하는 기업 본의주의의 병폐가 확산되고, 둘째, 국가보조금 지급을 통한 기업회생 구조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의한 전반적 경제위기를 초래한다. 이러한 북한의 기업경영방식은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중반 계획경제의 침체로 이어졌으며 4대 경제난(식량난·에너지난·원자재난·외화난)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북한의 기업개혁: 실익추구 기업경영방식으로서의 변화

북한은 경제위기 이후 실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기업경영 관련 정책을 시행해왔다. 2002년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 2010년 ‘기업소법 제정’, 2012년 ‘우리식경제관리방법’, 2014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2014년과 2015년 ‘기업소법 개정’, 2016년 ‘상업은행 설립’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북한의 기업경영방식의 변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장기화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에서 기업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무엇보다 기업경영에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기능이 완화되고 시장수요를 반영한 제품을 생산하고 시장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받음으로써 생산과 분배에서의 자율적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주된 특징이다. 우선 첫째, 생산을 위한 계획작성, 재정조달, 자재조달, 노력배치가 경제난 이전에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권한에 의해 생산계획, 재정계획, 자재공급계획, 노동배치계획으로 구체화 되었다면, 2002년 7.1조치 이후에는 중앙기업을 제외한 지방산업기업은 노동 배

치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분배체계도 물자 판매, 소득분배에서 국가의 물자공급계획, 예산제 및 독립채산제기업 규정에 따른 분배방식에 치중하였으나, 현재는 중앙부서, 지방부서, 기업소 자체해결 방식 등이 결합되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경영방식의 변화는 2002년 7.1조치(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해 계획지표가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세분화되어 중앙의 계획 수립 권한을 분권화한 기업개혁 정책시행에 의한 것이다. 결과 기업의 생산체계는 중앙기업과 지방기업 유형에 따라 주문 및 자체생산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즉,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작성에 따라 생산계획을 일률적으로 하달 받던 구조에서 중앙지표를 생산하는 중앙기업은 중앙의 계획기관에서, 지방지표를 생산하는 지방기업은 해당 지구 계획위원회에서, 기업소지표를 생산하는 중앙 및 지방기업은 자체의 자율적 결정으로 주문 및 생산을 진행할 수 구조로 변화되었다.

〈표 1〉 7.1조치를 통해 본 기업경영방식의 변화

구분		2002년 7.1조치 이전	2002년 7.1조치 이후
계획	계획작성	국가(중앙집권)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
	재정조달	국가(재정계획)	중앙예산, 지방예산, 기업소재산 (개인유휴자금 활용)
생산	자재조달	국가(자재공급계획)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 (중앙부서),(지방부서), (자체해결)
	노력배치	국가(노동배치계획)	국가공급+수요 중심 기업간 교류
분배	물자판매	국가(물자공급계획)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 (중앙부서),(지방부서), (시장활용)
	소득분배	국가(예산제), 기업(독립채산제)	국가공급+기업소 자체해결 공급

출처: 정은찬 2020, 81 참조하여 재작성.

7.1조치를 통한 북한의 기업경영방식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지표를 생산하는 중앙기업은 중앙의 생산계획(국가계획위원회와 내각 산하의 각 성별 계획)에 기초하여 생산하고, 생산품을 국정 가격에 의한 국가의 공급계획에 준하여 분배한다. 지방지표를 생산하는 지방기업은 각 지역의 수요가 반영된 생산계획(도·직할시·특별시 지구계획위원회 계획)에 준하여 생산한 이후 지역에서 책정한 가격(지역별 국정가격)을 기준으로 지역 내 공급계획에 따라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소지표의 생산은 중앙기업, 지방기업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지표를 선정한 이후 생산가능 여부를 상부기관의 검토를 거쳐 허가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자체로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할 수 있으며 시장가격으로 기업소 자체의 계획에 의해 판매할 수 있다.

북한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현실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계획작성 권한은 ‘중앙지표의 대폭적 축소와 기업소지표의 확대’ 및 ‘주문계약에 의한 계획화 방법의 도입’에 의해 확대되고 있다. 중앙지표의 축소, 즉 계획지표 분담체계가 간소화되는 부분은 중앙지표와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단순화시킨 데서 나타나는데, 기존의 계획지표는 중앙지표(방향별 지표 포함), 성지표, 도지표, 지구지표, 관리국(련합기업소)지표, 시·군지표, 기업소지표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이를 간소화하여 특히 국가계획위원회 지표는 대폭 축소하고 성지표는 모두 정리하여 기업체들에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전략지표와 국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지표만 중앙지표로 계획화하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 조정되었다. 전략지표에는 전력과 석탄, 지하자원과 강철, 시멘트와 곡식을 비롯한 36개 지표가 포함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표로는 총 17만개 지표 중에서 1,100개 지표로 정리되었다고 북한의 내부자료(2015년 교

육내용)은 밝히고 있다. 나머지는 지방지표와 시·군지표, 그리고 기업소지표로 분류되는데, 지표 수로는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국가지표(중앙지표)의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중공업부문의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도 70% 정도를 국가계획에 따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외경제 부문에서는 국가적인 전략지표와 제한 지표에 한해서만 현물지표로 계획화하고, 나머지는 기업체들이 무역 거래 상대방과 합의한 가격으로 무역을 진행하되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등록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이석기·변학문 외 2018, 74).

〈표 2〉 6.28, 5.30조치를 통해 본 기업경영방식의 변화

구분	권한이 확대된 주요 내용
계획작성	- 계획지표의 분담 및 간소화, 기업소지표 대폭 증가 ⇒ 국가지표 총 17만 개 중 국가 중요지표 1,100개 외에 지방(시·군)지표와 기업소지표로 규정(전체의 70%로 증가) ⇒ 계획평가: 중앙지표는 국가계획위, 지방지표는 지방인민위 담당
생산조직	- 중앙지표(전략지표) 중 국가통계품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 한하여 기업 상호 간 주문 및 계약에 따라 생산계획 허용 생산에 필요한 원료 및 자재 조달에서 지방 원천, 국산 적극 활용 주문 및 계약에 의한 생산조직체계 허용
재정 조달	- 기업이 국가 의존 관념에서 벗어나 자율적 경영자금 조성 과거의 국가 예산 공급 및 은행 대부 형식 방식에서 일부만 혜택 ⇒ 새로 조직되는 기업, 정책적 주요 단위, 4호 물자 기업만 포함 ⇒ 기타 기업은 개인유휴자금 이용 및 기업소 자체 조달로 충당 : 중앙은행발<기업체주민유휴화폐동원리용표준세탁>(2014.9.3.) ¹³⁾
노력 배치	- 필요 노동력 기업 간 교환, 불필요 노동력 다른 기업에서 활용 가능 - 노력 이동에 대한 승인 절차 대폭 간소화 및 감축
가격제정	- 기업소 자체의 노력으로 생산한 제품의 가격은 기업소 자체 결정
상품 판매	국가가 정한 범위에서 수요자를 정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생산수단 중 자체로 지표 찾아 생산한 제품은 합의 가격 적용 사회주의물자 교류시장을 통해 직접 판매 가능 ⇒ 소비품 ¹⁴⁾ 은 시장에 기업 전용 매대를 설립하여 자체 판매 가능

구분	권한이 확대된 주요 내용
자금활용	자금활용에서 국가에 의한 재정조달 및 남은 자금 국가납부를 준수 변화된 기업자금 활용에서는 소득에서 기업에 분배된 자금은 이용가능 ⇒ 남은 자금의 국가 납부제도 폐기 소득에 따라 국가예산납부를 수행, 남은 자금 자체로 기업경영에 이용 ⇒ 확대재생산, 생산공정 현대화,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
무역 및 합영· 합작	-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외국기업과 직접적 무역거래권한 허용 - 외국투자자와 합영·합작기업 설립하여 기업경영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과거의 국가요구를 반영한 성, 중앙기관 소속 무역회사 또는 전문 대외사업기관 설립에 따른 무역 거래, 합영·합작회사 조직방식 타파

출처: 이영훈 외 2020, 42 참조하여 재작성.

현 북한의 기업개혁은 첫째, 경제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축소하고 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켜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우리식경제관리방법’(2012.06.28.)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2014.05.30.)의 전면 시행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하고 기업경영 전반에서 자율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증가시킨 것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생산체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장수요를 반영한 기업소지표의 개발, 시장을 통한 생산·판매 제도의 구축, 가격제정 및 노력조절 권한 확대 등의 변화는 기업이 경제주체로서의 기능

13) 중앙은행에서 하달한 ‘기업체주민유휴화폐동원리용표준세칙’(2014.9.3.)에 의하면 북한의 개인은 중앙은행이 정한 현금대부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주민과 기업체)들 사이 상호 합의 하에 은행에 입금하고 계약 만료 시에 은행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체들의 유휴화폐자금을 저축성예금으로 전환하여 분기 4.5%, 반년 5.2%, 1년 5.5%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4) 기업이 생산한 소비품에는 생산 정상화를 위한 소비품, 종업원용 소비품, 기업소지표 생산소비품, 계획초과분, 판로가 제한된 수출 못한 소비품, 무역 및 외화벌이 통한 수입 소비품이 포함된다.

과 역할을 극대화하고 효율적 생산을 할 수 있는 전제가 되고 있다. 둘째, 북한의 기업개혁은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환경조성 기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술한 ‘우리식경제관리방법’(2012)을 비롯한 두 차례의 ‘기업소법 개정’(2014, 2015), ‘상업은행 설립’(2016) 등의 개혁정책의 시행은 시장을 통해 축적된 개인의 자본(유휴자금)이 국영기업에 합법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는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효과와 자율경영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의 확대 효과를 동시에 증가시키고 있다. 셋째, 북한의 기업개혁은 기업이 자체로 외국기업과 직접적으로 무역 거래 및 합영·합작을 할 수 있도록 자율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익 창출은 물론 무역수지를 증가시키는 등의 북한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기업개혁이 내재한 한계는 자율적 기업경영의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¹⁵⁾ 중앙지표를 생산하는 범위가 30%로 축소되고, 지방지표와 기업소지표의 생산범위가 70%로 증가하였으나, 70% 범위에 계획경제 방식의 기업경영과 자율적 기업경영 방식이 혼재해 있어 어떤 경우(계획 vs. 자율경영 비중)에 경제성장 도모에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북한이 기업개혁의 성과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계획경제 방식의 기업경영 비중보다 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

15) 북한은 2019년 신년사 경제 부문에서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며 경제의 전반적 부분을 정비 보강하고 활성화하는 국가적 작전을 집행할 것을 독려했었다. 특히 국가의 통일적 경제지도, 경제관리방법의 혁신,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맞게 계획화·가격사업·재정·금융관리 개선·기구 및 사업체계 정비를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는 북한이 기업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경제원칙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연구는 현재 전무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의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답하려고 한다.

Ⅲ. 기업경영방식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분석모형

본 절에서는 북한 기업의 생산방식을 시장에 의한 자율적 방식과 계획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한 CGE 모형의 구조를 기술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산활동에서 북한의 이중경제구조가 반영된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의 이중경제구조를 반영한 기존 연구로 정은찬·김재현(2020)은 사회주의 국가의 이중경제구조를 반영한 Xu(1993)의 연구를 토대로 북한의 계획경제 부문과 시장 활용 부문으로 구분된 이중경제 CGE 모형을 구축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소비와 투자 부문은 계획경제와 시장 활용 부문으로 구분되나, 생산은 구분되지 않은 모형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은찬·김재현(2020)의 연구를 참조하여 생산, 소비, 투자 부문이 계획경제 부문과 시장 활용 부문으로 구분된 CGE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북한경제를 계획경제 부문과 시장 활용 부문으로 구분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 내에 계획경제와 시장 활용 생산방식을 구분하여 적용, 계획경제에 의한 생산은 중간재와 노동만을 투입 변수로 설정하였고, 자본량은 중앙계획하에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 시장을 활용한 생산은 자본을 기업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생산함수 형태는 CGE 모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형태의 생산함수인 중간재와 부가치의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와 콥-더글라스 부가치 함수로 설정하

였다. 둘째, 모형 내에 계획경제와 시장 활용 생산 비중 값을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북한 내 계획경제를 통한 생산과 시장을 활용한 생산이 혼재하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북한 내 계획경제를 통한 생산과 시장을 활용한 생산 비중은 최지영(2017)의 연구에서 구축된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이하 SAM)을 원용하여 추정 후 모형 내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형의 구체적인 수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생산부문

생산은 계획경제 부문과 시장 활용 부문의 생산으로 구분된다. 계획경제 부문의 생산은 중간재투입(XT_f)과 노동투입(L_f)의 레온티에프 함수이다. α 는 함수의 가중치 모수를 의미한다.

$$Y_p = \min\left[\frac{XT_p}{\alpha_{T,p}}, \frac{L_p^{\alpha_k} \bar{K}^{1-\alpha_k}}{\alpha_L}\right] \quad (1)$$

시장 활용 부문의 생산은 중간재투입($XT_{j,i}$)과 부가가치(VA_i)의 레온티에프 함수이다. α 는 함수의 가중치 모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부가가치는 노동수요와 자본수요(K_i)의 콥-더글라스 함수로 표현된다.

$$Y_m = \min\left[\frac{XT_{if}}{\alpha_{T,m}}, \frac{VA_m}{\alpha_v}\right] \quad (2)$$

$$VA_m = L_m^{\alpha_m} K_m^{1-\alpha_m} \quad (3)$$

생산물은 국내재(XD_i)와 수출재(XE_i)로 구분되는데, 이는 CET 함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불완전 대체관계로 표현된다. 이때 ρ_{EX} 는 CES

함수의 대체탄력성을 의미한다. 이때 하첨자 i 는 계획경제부문(p)과 시장경제부문(m)을 구분하기 위한 하첨자이다.

$$Y_i = \gamma_f [\alpha_{EX,i} X D_i^{\rho_{EX}} + (1 - \alpha_{EX,i}) X E_i^{\rho_{EX}}]^{\frac{1}{\rho_{EX}}} \quad (4)$$

$$i \in \{p, m\}$$

국내에 공급되는 재화는 수입재와 국내재의 불완전 대체관계로 나타내어진다. Armington(1969)은 이러한 대체관계를 아래 CES 함수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이를 Armington 함수라 한다. ρ_A 는 Armington 함수의 대체탄력성을 의미한다.

$$A_i = \gamma_{A,i} [\alpha_{A,i} X D_i^{\rho_A} + (1 - \alpha_{A,i}) X M_i^{\rho_A}]^{\frac{1}{\rho_A}} \quad (5)$$

$$i \in \{p, m\}$$

2) 가계 및 정부부문

가계의 소비(C)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소비(cd_m)와 계획경제로부터 제공되는 재화에 대한 소비(cd_p)의 콥-더글라스 함수로 표현한다.

$$C = cd_p^{\alpha_c} cd_m^{1-\alpha_c} \quad (6)$$

정부의 소비(G)는 중앙의 계획에 의한 소비(gd_p)로만 구성된다.

$$G = gd_p \quad (7)$$

대표적 경제주체(Representative Agent)의 소득은 노동소득의 합에서 가계와 정부의 저축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노동소득은 계획

경제 부문과 시장 활용 부문의 소득으로 구분된다.

$$M = w_L \omega_L + w_H \omega_H - S_h - S_g \quad (8)$$

3) 투자와 저축부문

투자의 경우도 소비와 마찬가지로 시장 활용 부문의 투자와 계획경제 부문의 콥-더글라스 함수로 표현된다. 북한의 총저축은 가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으로 나타나며, 투자와 저축은 일치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는 거시경제 균형이 달성됨을 의미한다.¹⁶⁾

$$I = id_p^{\alpha_c} id_m^{1-\alpha_c} \quad (9)$$

$$S = S_h + S_g \quad (10)$$

$$I(r) = S(r) \quad (11)$$

단, I : 투자, S : 저축, r : 금리

4) 모형의 균형 조건

시장 활용 부문 기업 비중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초기 균형해와 시장 부문 기업의 비중이 확대되었을 때 해를 서로 비교하여 분석한다. 균형해는 모형의 균형조건으로부터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Rutherford(1999)에서 제시된 CGE 모형의 연산조건

16) 실제 북한경제 내에서는 금융기능이 취약하여 투자 대비 저축이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 경제에서는 투자와 저축이 일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반균형모형은 경제의 균형상태를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하는 모형으로 투자와 저축의 불균형 상태에서는 모형의 해가 도출되지 않는다. 또한 북한 시장 내에서도 고리대 등의 사금융이 발달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저축이 실제로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 투자와 저축이 일치한다는 가정하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을 이용하여 모형의 균형을 도출한다. 균형조건은 0이윤조건, 시장청산조건, 소득균형조건으로 구성된다. 0이윤조건은 생산자의 비용과 수입이 일치함으로 생산자의 이윤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경쟁시장의 조건을 말한다.

$$- \Pi_i(\vec{P}) Y_i = [Cost_i(\vec{P}) - Revenue_i(\vec{P})] Y_i = 0 \quad (12)$$

단, Π : 이윤함수, Cost: 비용함수, Revenue: 수입함수, $i \in \{p, m\}$

시장청산조건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의미한다. 단, 계획경제 부문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계획경제 부문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left[\sum_i y_{ir} \frac{\partial \Pi_i(\vec{P})}{\partial p_j} + \omega_i - d_i(p_i, M) \right] P_i = 0 \quad (13)$$

단, $d(\cdot)$: 수요함수, ω : 요소부존량, $i \in \{p, m\}$

소득균형조건은 가계의 소득이 주어진 요소부존량에 의한 소득과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의미한다.

$$[M - \sum_i P_i \omega_i] M = 0 \quad (14)$$

단, M : 소득, $i \in \{p, m\}$

본 연구에서 식 (12)-(14)에 대한 연산은 Rutherford가 개발한 MPSGE 모듈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Rutherford 1999). MPSGE에서 기준해는 1의 값을 가지도록 설정되며, 모수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기준해 대비 증가율에 1을 더한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2. 분석 결과

1) 자료 및 분석 시나리오

(1) 북한의 사회계정행렬 구축

CGE 모형은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이하 SAM)이 모형의 초기 데이터로 활용된다. SAM은 한 국가의 생산과 지출의 흐름을 행렬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은찬·김재현(2020)에서 구축한 북한의 2018년 기준 SAM을 활용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은찬·김재현(2020)의 연구에서는 소비와 투자 부문은 시장 부문과 계획 부문이 구분되어 표현되었으나, 생산 부문은 시장 부문과 계획 부문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N 북한 국민계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은찬·김재현(2020)이 구축한 SAM을 토대로 생산 부문의 시장 활용 부문과 계획경제 부문을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최지영(2017)이 추정한 북한의 계획경제(공식)부문과 시장 활용(비공식)부문의 요소투입비율을 활용하였다. 최지영(2017)의 연구에서는 계획경제 부문의 가계 노동소득을 5,520만 불, 시장 활용 부문의 가계 노동소득을 1,050만 불로 추정했다. 또한 시장 활용 부문을 통한 자본소득을 2,050만 불로 추정했다. 해당 연구에서 생산을 위한 노동수요가 6,380만 불, 자본 수요가 5,950만 불이므로, 총 요소수요 1억 2,330만 불 중에서 시장 활용 부문 요소소득 합 3,100만 불이 차지하는 비중 25.1%를 활용하여 중간재, 소비재의 시장 활용 부문 판매 금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구축된 SAM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시장 활용 부문의 생산 비중은 약 40%로 추정되었다.

(2) 모수 및 대체탄력성

CGE 모형의 초기 해 도출을 위해서는 생산함수 및 소비함수, 정부 지출함수 등 각 형태방정식의 비중 모수와 대체탄력성의 값이 결정되

어야 한다. CGE 모형에서 모든 가중치 모수는 SAM에서 계산된 각 부분의 비중 값을 모수로 활용한다. CET함수와 Armington함수의 대체탄력성은 신동천(1996)의 연구에서 추정된 대체탄력성의 평균값에 가까운 '3'을 각각 적용하였다.

(3) 시나리오 구성

본 연구의 시나리오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시장 활용 부문 기업과 계획경제방식에 의한 기업의 생산량 비중은 SAM으로부터 결정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축된 SAM에서 시장 활용 부문 생산액과 계획경제 부문 생산액의 비중은 각각 40%, 60%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 활용 부문 생산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경우와 작아질 경우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설정한 이유는 첫째,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이 늘어나면 양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북한 경제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에서도 이와 같은 방향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둘째, 시장 활용 기업의 생산 비중 확대 규모 대비 거시지표 변화량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셋째, CGE 모형은 경제 전반이 연결된 형태의 모형이므로 분석 결과가 단순히 시장 활용 비중 확대 시 생산량의 변화만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여러 해가 동시에 변화하며, 이러한 해의 변화를 고찰하면 생산에서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경로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AM의 시장을 활용한 생산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40%가 ① 30%로 하락할 경우, ② 50%로 확대될 경우, ③ 60%로 확대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본다. ① 30%로 하락할 경우는 북한 당국이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을 줄이고 계획경

제로 회귀하는 조치를 단행함을 의미한다.¹⁷⁾ ② 50%로 확대될 경우는 북한 당국이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이 늘어가는 현상에 제동을 걸지 않고 허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③ 60%로 확대될 경우는 북한이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더해 시장 활성화를 이용하는 적극적인 기업개혁을 추진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표 3〉 시나리오 구성

대상	시나리오 구성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	40% → 30%(S1)
	40% → 50%(S2)
	40% → 60%(S3)

2) 분석 결과

북한의 생산에서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때의 실물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 활용 부문 기업경영 비중이 40%에서 30%로 축소되고 계획경제에 의한 기업경영 비중이 60%에서 70%로 확대되면 북한의 실질 GDP는 1.38% 줄어들고,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이 50%로 확대되면 1.6%,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이 60%로 확대되면 6.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경제방식에 의한 기업경영 비중과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의 생산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 활

17) 이석기 외(2018, 74)에 따르면, 북한 내부문건자료를 인용(2015년 교육자료)하여 북한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전략지표와 국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중앙지표만 계획화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총 17만 개 지표 중 1,100여 개만 중앙지표로 정리하였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지방지표와 기업소지표로 분류하였는데, 그 비중이 70%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이 시장을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기업의 지방지표와 기업소지표 생산 비중을 30% 이하로 축소한다는 것은 곧 중앙지표의 비중을 현저히 높여 계획경제 방식의 생산을 늘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 확대에도 계획경제에 의한 기업경영방식의 생산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획 생산량을 유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시장을 활용한 기업경영방식의 생산은 비중을 낮추면 줄고, 높이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계획경제에 의한 기업경영방식의 생산은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규모 변화에 따라 시장을 통한 생산량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소비량의 경우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방식의 비중을 축소하면 계획경제에 의한 기업경영방식의 소비는 0.8% 줄지만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방식의 소비가 0.9% 늘어 소비량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 축소 시 북한 당국의 수입이 줄어 계획에 따른 주민 소비량 배급분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배급이 줄어들 경우 북한 주민들은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을 축소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통한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시장이 확대될 경우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의 소비가 모두 늘어 총 소비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방식이 50%로 확대될 때 0.7%, 60%로 확대될 때 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북한 국영경제의 수입이 늘고, 이에 따라 계획부문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계획소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장소비는 비교적 완만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량의 경우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을 30%로 줄이면 투자량은 6.7% 감소하고, 50%, 60%로 늘리면 각각 투자량이 15.9%, 65.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 축소 시 시장 투자량이 46.1% 줄고, 이 때문에 중앙의 계획부문 투자량은 0.9% 증가한다.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 확대 시에는 시장

부문에서 투자량이 크게 증가하는데, 50%로 확대할 경우 31.9%, 60%로 확대하는 경우 108.3%로 기존 대비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을 늘리면 투자량이 이처럼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신규 이윤 창출을 위해 투자량의 증가가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경제 전체 생산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경제의 수입이 늘어 시장 활용 기업의 투자량뿐만 아니라 계획부문의 투자량도 각각 12.8%, 57.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의 생산에서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이 확대될 때 실물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생산에서 시장 부문 비중 변화가 실물지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S1	S2	S3
실질GDP	-1.38%	1.60%	6.36%
계획경제에 의한 기업경영 부문	0%	0%	0%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부문	-4.6%	3.2%	10.6%
가계 소비량	0.0%	0.7%	3.8%
계획경제에 의한 기업경영 부문	-0.8%	1.0%	4.9%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부문	0.9%	0.4%	2.7%
투자량	-6.7%	15.9%	65.6%
계획경제에 의한 기업경영 부문	0.9%	12.8%	57.4%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부문	-46.1%	31.9%	108.3%

출처: 필자 작성

북한 내 생산에서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방식의 비중이 확대될 때 가격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부문이 40%에서 30%로 축소되고 계획경제 부문이 60%에서 70%로 확대되면 북한의 공급가격은 19% 상승하지만,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부문이 50%로 확대되면 공급가격은 19.6% 하락한다. 시

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부문이 60%로 확대되면 공급가격은 43.2%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비자 가격도 공급자 가격 변화와 비슷한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 축소 시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 확대 시 공급이 증가해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의 확대는 시장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북한 전역에 공급되는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소비자 가격 변화는 이러한 공급가격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의 확대가 공급 확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물건 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북한 주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의 생산에서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때 가격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생산에서 시장 부문 비중 변화가 가격지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S1	S2	S3
공급 가격	19.0%	-19.6%	-43.2%
계획경제에 의한 기업경영 부문	19.8%	-19.8%	-43.7%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부문	17.2%	-19.2%	-42.1%
소비자 가격	18.2%	-19.5%	-42.7%
계획경제에 의한 기업경영 부문	19.1%	-19.7%	-43.3%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부문	17.2%	-19.2%	-42.1%

출처: 필자 작성

북한의 생산에서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때 대외교역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달러

대비 북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이 40%에서 30%로 축소되고 계획경제에 의한 기업경영 비중이 60%에서 70%로 확대되면 16.2%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이 50%로 증가하면 환율은 24.5% 증가하고,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이 60%로 증가하면 환율은 76.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내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 확대 시 생산이 증가해 외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¹⁸⁾

무역수지는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이 40%에서 30%로 축소되고 계획경제에 의한 기업경영 비중이 60%에서 70%로 확대되면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역 흑자 폭이 0.4% 줄어든다.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이 50%로 증가하면 국제수지는 3.1% 증가하고, 60%로 증가하면 국제수지는 1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내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 비중 확대 시 환율이 상승해 교역조건이 개선됨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6〉 생산에서 시장 부문 비중 변화가 대외교역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S1	S2	S3
환율(북한원/달러)	-16.2%	24.5%	76.7%
무역수지	-0.4%	3.1%	13.9%

출처: 필자 작성

18) 이러한 결과는 북한 내 시장 부문에서 외환이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정은찬·김재현(2020)의 연구에서는 이를 모형 내에 명시적으로 고려하였으나, 본 연구는 북한 내 생산 부문 시장 확대가 대외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므로, 외환이 북한 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상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외환이 북한 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상을 고려할 경우 생산 부문 시장 확대 시 환율의 변화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의 요약

북한의 기업개혁은 그 추진경로를 추적할 때 중국, 베트남의 초기개혁 단계로 진단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시장기구를 결여한 경제분권화의 비효율성을 체험한 이후 1984년부터 도시 부문 경제개혁에 시동을 걸어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베트남의 경우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추진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신경제정책 도입) 수행에서 중앙계획과 통제의 완화, 사기업의 자율성 확대, 국영기업의 국가계획 이외의 자체적 제품생산 및 판매의 허용, 가내생산 장려와 금융지원 등의 기업개혁 조치를 추진하였다.

북한의 기업개혁은 중국, 베트남 모델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계획경제 영역 축소 및 기업의 자율적 경영 권한 확대 등으로 진보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이 수시로 제시되어 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기업경영으로의 전면 확대 및 소유구조의 개혁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대북제재·자연재해 삼중고에 직면한 북한 경제의 상황은 기업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정책 추진의 적기라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기업경영방식의 변화에 따른 정량분석 결과를 참조할 때 북한이 생산에서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방식의 비중을 축소하면 실질GDP가 감소하고, 투자가 줄어드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산 감소에 따라 물가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경영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면 실질GDP,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생산 증가에

따라 물가도 크게 하락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율이 상승해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기업경영방식을 계획경제에 의한 방식과 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구분한 최초의 정량분석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그러나 북한 내 계획경제에 의한 기업생산 비중과 시장 활용 자율적 기업생산 비중을 구분함에 있어 북한 내 국가가 하달하는 계획지표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후속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기업개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하여 외환이 시장 활용 기업경영 부문에서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는 현상을 반영한 모형을 활용할 경우 북한 내 자율적 기업경영 부문 확대에 따른 대외부문 파급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북한의 기업개혁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기업개혁은 선대지도자 시기보다 더욱 확대 추진되고 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시행과 ‘기업소법 개정’을 통해 기업경영체계가 개편되고 시장을 활용한 자율적인 기업경영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무엇보다 국영기업의 내수 시장거래 및 대외 무역거래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외국기업과의 합영·합작이 공식화·합법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북한의 기업개혁은 우리의 남북경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경제협력의 추진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기업개혁이 외국기업과의 무역 거래의 폭을 넓혀나갈 때 북한 국영기업의 남한기업과의 경제협력도 충분히 가능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내각 소속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외국기업과의 무역 거래 및 합영·합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과거와는 달리 직접 대외무역 및 합영·합작을 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기업경영 자율성 확대는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기업이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존에는 남북한 기업이 직접적인 경험을 추진하지 못하고 남한의 기업은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등을 통해서만 투자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구조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기업은 수동적으로 생산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 북한의 기업경영 자율권은 북한의 기업도 남북경협에서 남한기업과 동등한 경제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한기업과 북한기업의 직접적 무역 거래, 투자를 통한 임가공사업 확대 등이 본격화되어 남북경협을 넘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거듭난다면, 기업경영방식 변화에만 국한된 북한의 기업개혁은 더 나은 질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한 북한경제의 추격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투 고 일: 2020년 12월 29일

심사완료일: 2021년 02월 18일

게재확정일: 2021년 02월 18일

참고문헌

- 김석진. 2013. “북한의 경제관리방법 개혁 동향과 전망.” 『통일경제』 겨울호 18-25.
- 김연철·양문수·전병유·이일영. 2004. 『북한의 시장·기업개혁과 노동인센티브제도』.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영운. 2000. “북한 공장기업소 조직개혁, 그 의미는 무엇인가.” 『북한』 339: 88-99.
- 김영희. 2018. 『김정은의 경제개발, 오래된 미래』. 서울: 매봉.
- 박형중. 2015.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 1980년대 후반 중 국과의 비교.”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0 15-09.
- 박호림 외. 2002. 『공업경영학』(대학용). 원산: 원산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
- 박홍규. 2008. “경제전략, 기업전략에 대한 옳은 이해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3: 12-14.
- 송정남. 2015. “전략적 경제관리방법의 본질적 특징.” 『경제연구』 4: 14-16.
- 신동천. 1996. “수입재와 국내재의 대체탄력성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44(2): 101-118.
- 양문수. 2017.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26(2): 81-115.
- 양문수·윤인주. 2016.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통일연구』20(2): 45-88.
- 이석기·변학문·나혜선. 2018.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세종: KiET(산업연구원).
- 이석기·권태진·민병기·양문수·이동현·임강택·정승호. 2018.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세종: KIET(산업연구원).
- 이영훈 외. 2020. 『최근 북한 경제정책 동향 및 202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서울: 통일부.
- 정은찬. 2020.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와 투자환경』. 서울: 늘품플러스.
- 정은찬·김재현. 2020. “환율변화에 따른 북한경제 파급효과.” 『통일문제연구』 32(1):41-67.
- 최지영. 2017.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 『경제분석』 23(2): 58-95.
- 통계청. 2020. 『202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대전:통계청.

- 현영미. 2002. “이행기 사회주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_____. 2004. 『사회주의 체제전환: 진보인가 퇴보인가』. 서울:선인.
- Armington, Paul. 1969. “A Theory of Demand for Products Distinguished by Place of Produc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Papers* 16: 159 - 178.
- Hart, Oliver. 1995. “Corporate Governance: some theory and implication.” *The Economic Journal* 105(430): 678-689.
- Rutherford, Thomas. 1999.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ing with MPSGE as a GAMS Subsystem: An Overview of the Modeling Framework and Syntax.” *Computational Economics* 14(1-2): 1-46.
- Xu, Dianqing. 1993. “Price Distortion in the Transition Process: A CGE Analysis of China's Case.” *Economics of Planning* 26: 161-182.

Abstract

A Study on the Business Reform of North Korea

- The effect of changes in corporate management method on
economic growth -

JEONG, Eun-chan

Institute of Unification Educa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gress of North Korea's corporate reform, its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economic effects on economic growth using general equilibrium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if North Korea reduces the proportion of autonomous methods using the market in business management, real GDP decreases and investment decreases, which adversely affects the overall economy. In addition, this decrease in production has been shown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market price. In other words, as the proportion of autonomous business management using the market increases, real GDP, consumption, and investment all increase, which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overall economy. Has been shown to affect.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trade balance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in export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autonomous foreign trade by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irically show how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the Kim Jong-un regime's only partial reforms in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production system, excluding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reform, appear in the indicators promoting economic growth. This raises the need to pursue higher-level reform, such as further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autonomous business management methods in North Korea's corporate reform.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f North Korea pursues such desirable corporate reform, the environment for direct foreign trade of North Korean companies and joint ventures and joint ventures with foreign companies will be further expanded. This implies that it will be a major driver in realizing our North Korean policy goals, which are to be fixed and realize the new economic concept o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Corporate reform, market utilization, autonomous corporate management, central indicators, corporate ownership indicators